2020년 2월

문재인정부 실정 보고서

제 4 권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 극복해야 -

현상에는 늘 본질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에서 예견되었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 설계주의'를 부여잡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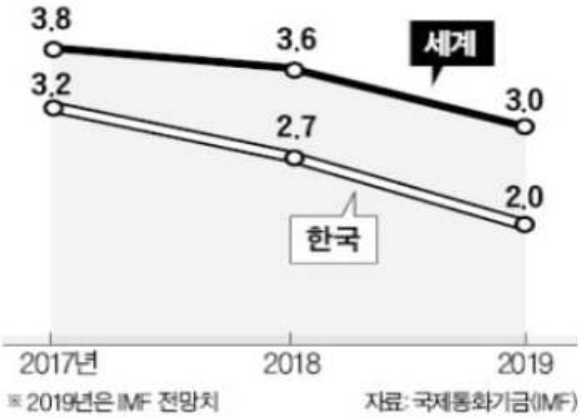
문재인 정권은 구두선(口頭禪)과 미몽에 취했다.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순환과정에서 '사전적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적 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구호는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날개, 치타허리, 코끼리다리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무지와 오만의 발로이다.

2020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함께 잘사는 나라'는 이상향으로 사회주의 구호에 가깝다. '함께 잘사는 나라'는 이상향으로 사회주의 구호에 가깝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그럴듯한 말 속에도 국가개입주의가 숨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인식이 적확하지 않고 경제 지력이 낮다보니 불필요한 형용사가 범람한다. 아니 시대착오적인 좌파 설계주의에 빠져있다 보니 듣기 좋은 구호로 포장한 정책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한다. 의도한 결과는 내지 못하면서 경제를 망가트릴 뿐이다.

문재인 정부: 4마리 토끼를 놓친 최악의 경제성적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4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고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훼손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제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에는 회복 불가능한 경제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은 [그림 1]과 같이 출범 첫해인 2017년 3.2%에서 2018년 2.7%를 거쳐 2019년 예상 성장률은 2.0%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의 경기 부진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부진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 평균을 3년 내리 밑돌았다.



[그림 1] 최근 3년간 한국 및 세계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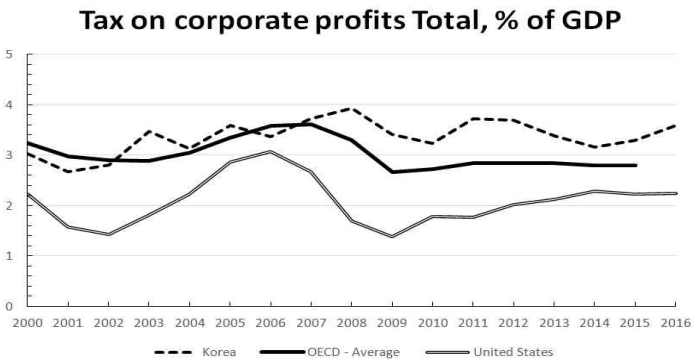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하위 20%(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비율]은 2013년 4.68배에서 2019년 5.3배로 악화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정부 예산으로 만든 '세금 일자리'는 거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2017년 32.9%에서 2019년 36.4%로 증가했다. 재정규율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 '재정 건전성'도 크게 나빠졌다.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2019년 37.1%로 증가했다.[그림 2]

[그림 2] 최근 4개 정부 경제성적표
자료: 조선일보 2019. 11. 6일자
주: 2019년 자료는 추정치

문재인 정부가 꿈에 그리던 bucket list, '증세와 최저임금인상'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야당시절 꿈에 그리던 '버킷 리스트'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해 12월에 증세를 단행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자증세'를, 소득세율 인상에는 '수퍼 리치에 대한 핀셋증세'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07년 이후 OECD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다. 그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2007년 이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 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를 앞섰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5억원이상)로 인상했다. 2018년 현재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그림 3]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GDP 대비) 자료: OECD Database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2017년 가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해,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후과(後果)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선'이자 '성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창과 칼'을 양손에 들었다. 날개를 달았다면 우리경제는 2018년에 도약을 했어야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7%)은 오히려 미국(2.9%) 보다 낮았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2.0%, 미국 2.3%로 그 차이는 0.3%로 더 벌어졌다. IMF외환위기, 메르츠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연속 2년'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과 칼'을 손에 쥔 1년 뒤인 2019년 1/4분기에 역(逆)성장(전분기 대비 -0.4%)이 이뤄졌다. '소득주도 역성장'으로 명명할 만하다. 2019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정점에서의 임기 시작'을 인지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그림 4]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은 경기 정점(2017년 9월) 근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곧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수축기에 들어설 것을 대비해 경제를 운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호황에 접어든 것' 같은 정책 행태를 보였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가 그 사례이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최저임금은 경기호황기에 올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神)이 아닌 이상 2017년 5월에 출범하면서 그해 9월이 '경기 정점'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기상황을 살필 의지도 지력(知力)도 없었다. 2018년에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기하강 조짐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판박이 말을 무수히 되뇌었다. 정책 실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림 4] 1990년 이후 한국 경제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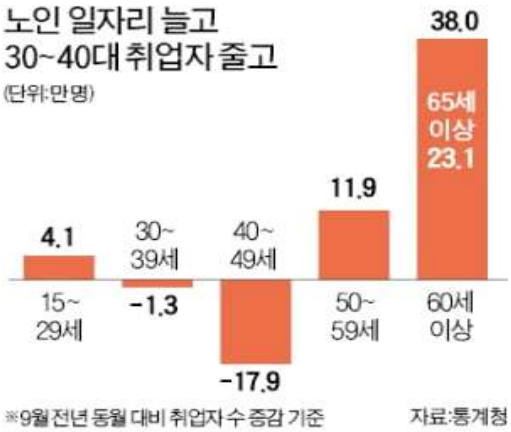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그림 5] 그 같은 발언의 논거는 '청년 고용률이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인식은 '정신승리법'을 의심케 할 정도이다.

2019.9.15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

[그림 5] 문재인 대통령 경제인식

[그림 6]에서 보듯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고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수는 크게 증가했다. 취업자 구조 변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



[그림 6] 취업자 증감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만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사람들은 임금 근로자 통계에서 빠진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고자는 '사람이 아닌 셈'이다. 2017, 2018년 2년에 걸

친 두 자리수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을 초토화시켰다. 2019년 상반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5000명, 5만3000명 감소했다.

재정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

[표-1]은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 세수는 통상 실질경제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경상성장률에 의존한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6년, 2017년 예산은 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2019, 2020년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9%를 넘어 경상성장률 3%대를 크게 웃돈다. 조세수입 이상의 정부 지출 예산은 적자재정을 부르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귀결된다. 2019년에 이미 적자국채가 33.8조원 발행됐고 2020년 적자국채 발행 한도는 60.2조원으로 잡혔다.

예산편성	년도	정부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경상성장률(%)	적자국채 발행액
박근혜 정부	2016	386조	2.9	5.0	
	2017	400조	3.7	5.5	
문재인 정부	2018	428조	7.1	3.1	
	2019	470조	9.7	3.0(e)	33.8조
	2020	513조(e)	9.3	3.8(e)	60.2조

[표-1]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추세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 경상성장률은 명목GDP 증가율

2019년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빚을 전제로 편성한 팽창예산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적자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다. 이는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표 계산'에 함몰되어 있다. '타다 금지법' 발의와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글로벌 M&A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가 그것이다. 양사 합병이 이뤄지는 경우 거대독점 기업이 탄생하고 이로 인해 영세 '외식업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언제든지 새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우려로 성공한 스타트업의 싹을 자른다면, 이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이야기하지만

공유차 서비스 ‘타다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에필로그

문재인(2017. 5. 10)과 마크롱 대통령(2017. 5. 14)은 같은 시기에 행정부를 꾸리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 성과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던 프랑스가 마크롱의 개혁으로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거듭날 기세”라고 평가했다.

프랑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8.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 하락폭도 괄목할 만하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2017. 5월) 직후 23%를 웃돌았던 청년 실업률은 2019년 7월 19.2%로 2년 새 4%포인트 떨어졌다.

마크롱 노동개혁의 핵심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다. 마크롱은 ‘개별적 근로관계법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수정에 방점’을 찍었다. 강력한 전국·산별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유연성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이들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시켜 기업별 교섭 및 협약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기업의 부당해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기업들은 부담이 줄자 오히려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로버트 배로(R. Barro) 교수가 한국의 유력 경제지에 기고한 글(2019. 12. 8)은 제3자의 시각을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지는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촌철살인 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체계에 ‘시장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그리고 이익집단’이 채운 나머지 자율과 경쟁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민간은 구축된다.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40대 제조업 일자리 한자리’와 세금이 들어가는 ‘60대 사회적 일자리’가 등가물(等價物)로 통계에 잡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 경쟁에서 ‘정부가 이길수록’ 재정은 탕진되고 일자리 질은 나빠진다.

원점으로 회귀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부가가치를 팔아 현금화한 뒤, 생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나눠줄 때 비로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

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기업만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으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경직성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自害)이다. 시장은 거대한 규제가 완화된 '규제샌드박스'여야 한다. 지금의 저성장 추세를 막지 못하면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文 케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의료보장 강화 시책이다. 문 정부 임기 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적용률을 63%에서 70%로 높인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병원은 실제 비용 대비 60% 대인 낮은 보험진료비 수입을 비급여 항목의 높은 진료비 수입으로 보전해왔다고 한다. 문 케어 발표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실무자는 “비급여를 전환할 때 ‘되도록이면’ 실제 진료비를 보험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했다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 케어의 실시로 환자들은 의료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환영할 일이지만,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다. 병원은 급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진료비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으나, 일반수가가 보험수가로 되어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환자들은 진료비가 싸지므로 병원을 돌아다니는 소위 ‘의료쇼핑’을 하고, 병원은 진료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의료비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 케어의 실시로 7년간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은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복지부는 문 케어 실시에 따른 비용이 2022년까지 약 30.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13~14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 적자가 발생했고, 문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는 17조 2천억원, 다음 정부 재정적자는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적립도 당초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고갈될 전망이다(예산정책처).

문 케어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 케어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

대로 추정하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을 보험료 수입으로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보험료를 매년 8% 이상으로 인상을 전제로 했어야 했다. 보험료를 매년 8% 이상 인상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하다(2013~2016년 보험료 인상률은 1% 대, 2017년엔 동결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왜 그런가? 보험료를 매년 급격히 올릴 수도 없으려니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에 12.8%, 2025년 20%, 2065년엔 42.5%로 급증할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436만 원에서, 2030년엔 760만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2014년 노인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연령보다 4.2배 많았다.
 이러하니 건강보험제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극찬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장성 확대로 국고 보조 없이는 장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해지고 말았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할 제도다. 면밀하고 조심성 있게 장기 재정전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당장 인기만 생각해서 무작정 보장을 확대하면 장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장래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필요한 개혁은 않고, 인기에 연연하여 앞 뒤를 재보지도 않고, 무작정 퍼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무모한 개편을 서둘러 시행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매년 대폭 늘어나야 한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청년세대, 어린아이들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만일, 장래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는데도 국고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불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 닫는 병원들이 발생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의료제도가 붕괴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건강보험제도는 근본을 뒤집는 뼈아픈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